

# 내일부터 지선 선거운동 본격화

### 31일까지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에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 이용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공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공고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연설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지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사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5·18 민주화운동 현안 해결 협력”

국힘 정운천 의원, 42주년 추모제 초청받아



5·18유족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추모제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초청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추모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5·18유족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심사를 통해 5·18단체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는데 앞장서온 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올해에도 추모제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까지 5·18단체와 2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5·18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법을 통과시켰고, 형제자매에게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덧붙여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5·18단체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위원장과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최초로 5·18 추모제와 5·18 부활제에 5·18단체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지난 12일 5·18단체로부터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까지 수상하는 등 보수정당을 향해 높게 드러워져 있던 얼음장벽을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도, 이해충돌방지제 운영 지침 시행

전북도청 소속 5000여명 공직자들에게 적용

전북도가 전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북도청 소속 약 5,000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먼저,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도시개발구역 등 32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으로 정했으며, 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개발업무 연관성이 적은 농업기술원, 아린의청의체육관, 자치경찰위원회 등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 제정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적이익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외의 거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했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채용 및 계약 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 및 계약의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수소산업 성장동력 장착

수소경제 선도... 전북도 수소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전북도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른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소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출범한 전북도 수소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현재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과 및 정부의 수소정책에 대한 전북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정부 부지지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도 혁신성장산업국장)과 위촉직 위원(연구·공공) 5, 안전(전문가) 3, 기업 2)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새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마련,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 여건이 변화하는



지난 3월 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출범한 전북도 수소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상황에서 전북도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도 수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수소융합검사지원센터’ 건립과 연료전지 재사용·재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

업을 완주 일원에 추진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5개소 이외에 전주, 군산, 부안 등에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2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를 구축해 수소산업 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